

“아시아나 매각, 두 당사자 만나 불확실성 해결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아시아나 M&A 종결 안될 경우
기안기금 등 정부 지원 어려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과 관련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점에서 재협상하지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의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선 두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간산업안정기금지원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수합병(M&A)을 끝내지 않는 이상 기안기금을 지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종결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정부지원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 의 일문일답.
-우리금융 민영화 이야기가 나온다. 지분 매각 시점이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당초에는 상반기 중 민영화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시피 코로나19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주가가 하락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지,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일정 기준에 맞춰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다. 오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때 논의를 통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금지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를 금지한 3개월 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다. 다만 주식이 오른 이유가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전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주식이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오는 9월이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환원·연장 여

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매도를 오는 9월 환원해야 한다면 제도개선과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했다. 토스의 인터넷은행 허가가 반환될 가능성 있다.

“토스의 보안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재 경찰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토스의 보안문제와 인터넷은행 허가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만약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춰 시정이나 제도 개선 부분은 추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인터넷은행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자금요구가 큰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쌍용차처럼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은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내놓는 경우 팔릴 수도 있고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의 경우 지원을 통해 기업도 채권단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쌍용차도 유동성을 위해 자산을 내놓는 경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 통장처럼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가 늘고 있다. IT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하던 원하지 않은 앞으로의 추세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영업 다툼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만큼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 서로가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를 배제하는 방법 외에도 금융회사와 빅테크기업의 합병이나, 금융회사 플랫폼을 빅테크 기업이 이용하거나, 또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나누리 기자 yull15@metroseoul.co.kr

중소기업 등 사용자 “동결” 노동계 “소폭이라도 인상”

>> 1면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서 계속

이처럼 첫 전원회의에 민주노총측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 결정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측의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앞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만만치 않고 사대 장기화시 일자리 보존도 힘든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이지만 기폭이나 취약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논리다.

지난달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목소리(80.8%)는 최근 5년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다른 사용자측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낸 논평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 해야한다”며 ‘동결’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여당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고령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한시적 10% 감액’을 건의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고령자 등의 임금을)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등의 고용시 수습 기간 등에 적용하는 감액 기준을 고령자 신규 채용시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채용을 미루고 있던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초반부터 노동계측은 기싸움하며 내심 ‘인상’을, 사용자측은 공식적으로 ‘동결’ 등을 주장하고 있어 남은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선 양측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져 사회적 합의 없이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들 손에 내년 최저임금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우선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KB 금융그룹

국민의 편에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통신 혜택과 카드 혜택의 만남!



KB국민 Liiv M카드

LiivM 통신요금 자동이체하면 최대 1만 5천원 청구할인

전월 이용 실적	1구간(50만원 이상)	2구간(100만원 이상)
할인 금액	10,000원	15,000원

LiivM 통신료 자동이체 할인 서비스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율+3%p, 최고 연 24% *연체발생 시점에 정상이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할부 수수료율 적용 *유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 수수료율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해 제한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구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국내, 해외경용 2만원 *전월 실적구간에 따라 차등 적립, 할인 및 개별 서비스 한도가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전월 이용실적,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0-C2b-02111호 (2020.03.13~2021.03.12)

KB국민카드